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### 미국 재정적자 감축 논란 확대

- 미 백악관과 의회는 연방정부 폐쇄 시한을 한 시간 가량 앞두고 385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였으나,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 문제에 대한 백악관과 의회의 대립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
  - 미국 정부부채는 상한선인 14조 2천억 달러에 근접한 상황이며 5월 16일 경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부부채 한도의 상향조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미 정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.
  - 정부부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의 채권발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부부채 한도는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왔으나,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화당 측이 추가적인 상향조치에 강하게 반대함.
  - 공화당은 정부부채 한도 상향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삭감계획 없이는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.
  
- 한편 지난 13일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예산과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년까지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함.
  -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제안하고 있는 메디케어, 메디케이드 등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은 거부하였으나, 의료비용 감축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 부문에서 4천 800억 달러의 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.
  - 이번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은 4천억 달러의 국방비 지출 삭감,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폐지 및 소득 상위 2% 계층에 대한 항목별 세액공제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  - 이번 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제안을 절충한 것이지만 공화당 측은 이번 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, 향후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(LA Times 등, 4/13)